



2017.07



홈페이지: <http://iscenter.or.kr> 이메일: iscenter2015@gmail.com
주소: (150-300)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47길 2 2층
전화번호: 070-7631-0615

목차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진보 사이클이 끝난 것인가, 아니면 혁명적 물결의 과정인가? – 1부 [3](#)

2. 같이 한걸음

G20 반대 시위 참가자들 경찰의 폭력적 탄압에 맞서며 더 나은 세상을 요구하다 [9](#)

독일 의회,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 [12](#)

영국, 긴축재정에 저항하는 흐름이 강해지다 [17](#)

RCEP가 식량과 농민에 미치는 영향 [22](#)

3. 변화의 물결

그래! 가자 제헌의회! [26](#)

4. 국제뉴스

[라틴아메리카] 세계 민중대회 선언문: 보편적 시민권을 향한 국경 없는 사회를 위하여 [28](#)

[일본] 가케(加計)학원 문제 등의 본질: 공문서 관리와 정치주도·간부인사의 형식을 재고한다 [32](#)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진보 사이클이 끝난 것인가, 아니면 혁명적 물결의 과정인가? – 1부

(맨위로)

글 :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볼리비아 부통령)

번역 : 심태은(The 숲 한글판 편집장, ISC)

* 본 기사는 더 던 뉴스(The Dawn News)의 “The end of the Progressive Cycle? Or a process that goes through Revolutionary Waves? Part 1

(<http://www.thedawn-news.org/2017/06/30/the-end-of-the-progressive-cycle-or-a-process-that-goes-through-revolutionary-waves/>)”를 번역한 글입니다.



(사진 출처 : 엘 오르덴 문디알¹)

본 기사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부는 추후 더 던 뉴스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본 글은 요약본으로, 스페인어 원문으로 된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역사적인 변곡점을 지나는 시기를 살고 있다. 지난 10년 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에서 혁명적이고 진보적 세력이 정치적 승리를 확장해 나갔지만, 현재에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주춤하고 있고, 세력이 축소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선거 패배 이후 온두라스,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브라질에서 보수 정치의 음모가 나타나고 있다.

¹ El Orden Mundial

체계적인 경제 공격과 함께, 많은 경우 집단적 행동이 뒤따르는 선거 절차와 숨길 수 없는 외부적 음모를 통해 보수 세력은 지난 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일부 정부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전 수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수 많은 사회적 승리가 무위로 돌아갔고, 이념적인 미디어 선전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진보 정부가 패배를 맞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위 “사이클의 종료”를 운운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이클의 종료”를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목적은 인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자 역사를 설명하는 근원으로서 인간의 실천을 훼손하고, 어떠한 사건이 인간의 행동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닌,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기는 패배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는 무기력한 사회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르네상스 이전의 이념적 개념으로 되돌아가는 구태의연한 후퇴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세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자결권을 제거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다.

우파와 제국주의 세력은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민중의 해방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 명백하다. 이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사회적 이유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그들은 좌파 정부와 사회 해방 프로세스에 대해 적대적 행동을 지속할 것이다.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공격은 지난 세기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그것과는 형태가 다르다. 과거에는 공공연하게 무력을 쓰는 것을 선호했으며, 뒤에서는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사회보다는 군사독재를 지지했다.

이제는 언론,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먼저 공격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또 필요한 경우에만 무장 세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가지고 사회적 충돌을 일으킨다. 오늘날 주로 사용되는 가혹한 공격의 수단은 대상 국가의 경제를 약화시키는 것, 경제적 보이콧, 정부와 사회 혁명 세력에 대한 이념적-문화적 포위공격 등에 집중되어 있다.

예전에 미 육군이 전 세계에서 게릴라와의 전투를 위해 손자병법을 도입했다면, 오늘날 미국무부에서는 대(對)게릴라전 전략가 그람시의 서적을 필독서로 채택했다.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새로운 권력 다툼이라는 맥락에서 문화적 전투가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라틴아메리카의 황금기로 여기는 시기에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1세기의 시작 이후 1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19세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건국된 이후 사상 최대의 자치와 주권 확립이라는 시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했다. 어떠한 과정은 다른 것보다 더 급진적이기도 했고, 이 과정이 도시 중심이거나, 농촌 중심이기도 했으며, 서로 다른 언어로 진행되었지만, 모두가 진정한 융합의 방식을 거쳐

이루어졌다.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주권을 세웠던 승리의 10여년 동안 크게 4가지의 역사적 성과가 있었다.

1. 정치적 민주주의 확대

제국주의 지정학적 이해에 따른 정치적 돌격대로서의 군부가 퇴장한 이후, 민주주의는 하위 계급을 위한 헌법적 권리의 보장,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선거권 보장, 기본적 인권의 회복, 정도는 덜하지만 결사의 자유 등의 유효성을 상징했다.

그러나, 독재 이후의 민주주의가 하위 계급이 정치적 결정과 국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그저 권리의 민주주의였을 뿐,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좌파 사회계급과 대중세력이 강력하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집회나 사회운동, 국가권력의 쟁취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전에는 정부 구조에서 배제되었던 대중세력과 좌파세력의 선거 승리일 뿐만 아니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전 세계적인 대중운동의 위축과, 대중세력 내에 팽배했던 패배주의를 반영하고 개인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미립자 변혁’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 쟁취를 위한 대규모 정치적 싸움을 하지 말자는 요구가 구현된 슬로건인 ‘권력 쟁취 없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약화되던 시기에 촉발되었던 논쟁을 극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평등 확대

두 번째로,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 국가의 사회적 영역에서 사회적 부가 엄청난 규모로 재분배되어 지난 수 십 년 간 커질 대로 커진 불평등과 부의 형성 간의 고리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곳으로 만들었던 부를 초집적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맞서, 2000년 이후 혁명적이고 진보적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정부는 강력한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여 노동계급의 삶의 조건을 대폭 향상시켰고, 수 백만 명에 달하는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났으며, 중산층을 위해서는 사회의 진전을 위한 객관적 선택지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의 재분배는 중산층의 확대로도 이어져, 사회정치적 의식의 확대가 아닌 소비능력의 신장을 낳았다. 노동자, 농민, 원주민의 소비능력도 커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십 수년에 걸쳐 사회적 불평등이 역사적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90년대에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100, 150, 심지어 200배에 달했다면, 2010년경에는 이 수치가 80, 60, 40배로 줄어들었고, 이는 사회 각 분야에서의 참여와 평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포스트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경제와 부 관리

세 번째 성과는 경제 관리 측면이다. 각 국가는 정도는 다르지만 포스트 신자유주의 계획을 실험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포스트 자본주의 계획이 아니다. 포스트 자본주의 계획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행될 때 성공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포스트 신자유주의 계획을 통해 국가적 이해와 대중계급을 우선하는 부의 생산과 경제적 행정의 규제에서 각 국가가 강력한 주체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기업을 국유화하거나 공기업을 설립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정부가 경제, 사회적 잉여의 관리,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 노동자 소득 증대 등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정부가 내수시장, 부의 분배자로서의 국가, 전략적 경제부문에서의 국가 참여 등의 중요성을 회복하면서 경제 관리를 포스트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은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궤도에서 반환점이 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경험을 통해,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유일하게 가능한 세상'이 아니게 될 것이다. 오늘날, 부와 경제를 관리하는 다른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신자유주의가 정체되고, 부패하며, 낡은 체제임을 보여주는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경험에서 나타난 각종 장애물이 있지만, 남반구 국가²들은 지울 수 없고 결정적인 깃발을 남겼다. 즉,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신자유주의가 역사의 끝—사실 신자유주의가 계속된다는 것은 역사를 화석으로 만드는 것이다—이 아니며, 부가 다른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고, 이렇게 생산된 부를 분배하여 대중 계급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 민중에게 실질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다.

4. 진보적이고 자주적인 라틴아메리카 인터내셔널의 건설

네 번째로, 21세기 라틴아메리카의 각성은 자주권과 자결권에 기반한 대륙차원의 외교 정책의 생산(라틴아메리카 국가 건국 이후 최초)으로 규정된다.

19세기 이래로, 라틴아메리카 외교정책의 큰 그림은 영국 제국, 이후에는 미 제국의 감독 하에 있었다. 이들 제국은 채권, 관세, 기술이전, 담론, 정부 안전성을 통제했고,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정치적 질서를 관리했다.

² 선진국이 대체로 북반구에 위치하고 발전도상국이 남반구에 위치하는 데서 비롯된 명칭

그러나 21세기 들어 이 질서가 무너졌다. 민중을 대변하는 정부가 승리를 거두면서, 비공식적으로는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인터내셔널이라고 칭하는 단계가 라틴아메리카 대륙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위원회(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서 그랬듯) 같은 기구는 없었지만, 룰라 다 실바³ 브라질 대통령, 네스토르 키르치네르⁴ 아르헨티나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⁵ 에콰도르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⁶ 볼리비아 대통령, 우고 차베스⁷ 베네수엘라 대통령, 다니엘 오르테가⁸ 니카라과 대통령이 모여 라틴아메리카 인터내셔널 중앙위원회라고 칭할 수 있을 회의체를 구성했고, 이는 자주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각국의 미래를 계획하는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그 동안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운명을 결정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했던 미주기구(OAS)는 그 영향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마침내 남미국가연합(UNASUR, 우나수르)과 중남미·카리브 해 국가 공동체(CELAC)라는 라틴아메리카 차원의 기구가 탄생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배제되었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자신의 운명을 토론하고 결정하게 되었다. 100년, 아니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는 상상할 수 없었다.

이는 이전 같았으면 최소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필요로’했을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국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웃국가 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2002년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대통령과 2008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시도가 그 예이다.

2008년 8월과 9월에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부통령인 필자는 우파 파시스트 세력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주에는 한 발자국도 디딜 수가 없었다. 민주정부가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할 권한을 상실했고, 의회 폭력배가 이를 탈취해 소위 ‘이중적 지역 권력’을 수립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가권력을 부정하고 내전을 촉발하고자 했다.

그러나 키르치네르 대통령, 차베스 대통령, 코레아 대통령, 그리고 룰라 대통령 등이 UNASUR에서 함께 연대했기 때문에 볼리비아는 파시스트 세력에게 권력을 찬탈 당하는 것을 막고 정치권력을 국가 정부의 손에 되돌려놓는 등의 민주적 질서를 회복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난 십 년여 간의 승리는 정치적 변화(새로운 국가 건설 과정에 민중이 참여), 사회적 변화(부의 재분배와 불평등 감소), 경제적 변화(국가의 적극적 경제 개입, 내수시장 확대와 신 중산층 창출)를 가져왔고,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존재

³ Lula da Silva

⁴ Néstor Kirchner

⁵ Rafael Correa

⁶ Evo Morales

⁷ Hugo Chávez

⁸ Daniel Ortega

없이 라틴아메리카 국가간 정치적 협력을 달성했다. 이는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니다. 19세기 이래로,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역내 통합, 자주와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십 수년은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2. 같이 한 걸음

G20 반대 시위 참가자들 경찰의 폭력적 탄압에 맞서며 더 나은 세상을 요구하다

(맨위로)

글 : 제시카 코벳

번역 : 홍정희(번역팀, ISC)

* 본 기사는 그린 레프트 위클리(Green Left Weekly)의
“Defying police attacks, G20 protests demand a better world”
(<https://www.greenleft.org.au/content/defying-police-attacks-g20-protests-demand-better-world>)를
번역한 글입니다.



지난 7 월 6 일, 함부르크에서 G20 반대 시위대를 해산시키고자 최루가스과 고성능 물대포를 사용하는 독일 전경의 자극적인 이미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거리의 시위대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했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

주요 20 개국 정상과 중앙은행이 모인 국제포럼인 G20에 항의하기 위해 수만 명이 함부르크에 몰려들었다. 시위대는 유럽 신자유주의 엘리트와 극우파가 제시한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모였다.

7 월 7 일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세계 지도자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독일 당국은 독일 경찰의 삼엄한 보안태세로 인해 비난을 받았다.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G20 반대 국제행동⁹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⁹ NoG20 International Coordination

무장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참정권의 제한을 통해 뒷받침되는 신자유주의와 전쟁의 정치가 우리 도시에서 결정된다. 민주주의를 차단하는 단 한 가지 목적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을 방어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시위는 새로운 세계를 대변하는 것이자 새로운 세계의 목소리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국은 공항과 회담장 주변 15 평방 마일에 시위 금지령을 내려 세계 정상들과 정상회담에 항의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었다.

전 세계에서 온 시위대에 합류한 함부르크 시민 조지 레츠¹⁰는 가디언¹¹과의 인터뷰에서 "최악의 반(反)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우리 도시에 온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많은 함부르크 시민들은 세계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 세계에 있는 트럼프, 에르도안, 푸틴 같은 이들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그러나 지역 정치인들과 경찰 당국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BBC 방송은 "경찰이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Welcome to Hell)"와 '박살내자 G20(Smash G20)'과 같은 표어를 들고 행진에 참석한 수천 명의 반(反) 자본주의 시위 참여자를 기소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병과 돌, 화염병을 던진 복면 시위대에게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발사했다.

"G20: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G20 : Welcome to Hell)"은 함부르크에서의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등록한 여러 그룹 중 하나인 반(反) 세계화 운동가 그룹이 내건 구호이다. 7 월 6 일의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행진은 경찰과의 충돌로 공식적으로는 취소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남아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과 시위자들이 부상을 입었으나, 이들 중 다수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격화하는 곳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전날까지 시위대는 G20 정상들에게 전쟁, 이민, 환경 정책 등 여러 가지 민족주의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종식하라고 촉구하며 평화 시위를 벌였다.

7 월 5 일, 온몸을 회색 점토로 뒤덮은 1,000 여명의 '좀비'가 거리에 나타나 걸거나 땅바닥을 기어 다녔다. 이러한 정치 좀비들은 최근 도시 전역에서 쏟아져 나와 "정치 무관심"과 "파괴적인 자본주의 영향"에 대항하는 행진을 벌였다.

전 세계 텔레비전 화면에 묘사된 현지의 폭력적인 장면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에게, 독일 거리에 모여든 수많은 활동가들은 세계 초강대국이 어떻게 정책을 제정하고 그들의 의제를 압박하는지에 대해 복잡하고 도발적인 도전장 냈다.

¹⁰ George Letts

¹¹ The Guardian : 영국 일간지

로렌조 마르실리¹²와 주세페 카치아¹³는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민주정치를 건설하려는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최고의 해결책은 G20 정상회담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함부르크 거리에서 찾을 수 있다"며, 오늘날 글로벌 거버넌스¹⁴의 위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체계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정책비평(Policy Critique)에 기고했다.

7 월 6 일에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¹⁵의 닉 디어든¹⁶은 지금 당장 민주주의!(Democracy Now!)¹⁷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대안 세계를 만들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깔린 배경음은 실천의 소리"이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G20가 만들어낸 세계와 반대되는 즉, 우리가 실제로 보고 싶어 하는 세계에 대해 많은 논쟁을 매우 사려 깊게 벌이고 있다. 실제로 매우 역동적인 분위기이다. 물론 사람들은 무서워한다.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다. 트럼프가 그 상징이다. 그러나 동시에, 뭔가 매우 다른 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 이면에는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더 큰 힘이 있다."

¹² Lorenzo Marsili

¹³ Giuseppe Caccia

¹⁴ global governance 세계적 규모의 문제들에 국가가 충분히 대응하지 않을 때, 국제사회가 그 해결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 세계적 규모의 협동관리 또는 공동통치라고 한다

¹⁵ Global Justice Now

¹⁶ Nick Dearden

¹⁷ 즉각적으로 민주주의가 시행돼야한다고 요구하던 정당 DJ(Demokratie Jetzt; Democracy Now)

독일 의회, 동성 결혼 합법화¹⁸ 법안 통과

(맨위로)

글 : 케이트 코놀리¹⁹

번역 : 지민경, 예선희 (번역팀, ISC)

황정은 (사무국장, ISC)

* 본 기사는 더 던 뉴스(The Dawn News)의 “German parliament votes to legalise same-sex marriage”

(<http://www.thedawn-news.org/2017/07/05/13702/>)를 번역한 글입니다.



독일 연방 하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가결함과 동시에 녹색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에서 반짝이 종이꽃가루를 뿌렸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동성 커플들은 키스를 하며 겨ான 진풍경이 펼쳐졌다.

동성 결혼에 대한 수십 년 간의 광범위한 논쟁이 반영된 40분간의 열띤, 때로는 매우 감정적인 토론 후 진행된 표결 결과는 찬성 393명, 반대 226명, 기권 4명이었다. 앙겔라 메르켈²⁰ 총리는 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을 촉구하며 법안 통과의 길을 텃지만, 정작 자신은 반대표를 던졌다.

¹⁸ 동성 결혼을 ‘합법화’ 또는 ‘법제화’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기사에는 과거에는 금지되었던 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합법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독일에서는 1871년에 형법 175조에 따라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했고, 1994년 통일 독일에서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유효했다. 이후 2001년에 시민결합(동성 커플의 동거)을 인정하는 법안이 시행되었다.

¹⁹ Kate Connolly

²⁰ Angela Merkel

지난 월요일, 메르켈 총리는 “동성 파트너십²¹과 이성간의 결혼은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그 동안의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는 것처럼 보였다. 연방 하원 투표함에 빨간색의 “반대” 카드를 넣으며 메르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법으로 정의된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논의는 오랜 시간 동안 격렬하게 이루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정적인 것이었으며,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다가온다. 이를 계기로 양측의 의견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더 큰 평화와 결속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2001년부터 독일 내 동성 커플은 합법적으로 시민결합²²의 형태로 동거를 할 수는 있었으나, 결혼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으로 이번 해가 지나기 전에 동성 커플도 이성애자 커플처럼 결혼을 하고 입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 결과는 6월 30일에 23년의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베테랑 동성애 인권운동가 폴커 벡²³(56세) 녹색당 의원에게는 깜짝 선물과도 같은 승리였다. 독일 DPA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오늘 (동성 결혼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비로소 사라졌다”고 말했다.

1990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했던 독일 레즈비언 게이 연맹(LSVD)은 표결 결과를 환영하며 발표한 성명서에서 “독일이 사랑에 표를 던진 것,”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레즈비언과 게이뿐만 아니라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가 영리한 책사로써 이번 표결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안 가결에 하원의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놀랐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수십 년 간 메르켈 총리와 그의 연합 세력이 동성 결혼을 반대해 왔음에도, 메르켈 총리가 이번 표결을 이끌어낸 것에 대한 공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메르켈 총리는 연정 파트너이자 9월 선거를 준비하면서 동성 결혼을 주요 선거운동 이슈로 다루어 온 사회민주당(SPD)을 효과적으로 앞지르게 되었다.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교민주연합당(CDU)의 일부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표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분노했지만, 메르켈 총리는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취한 것을 통해 불만이 있는 의원들에게도 당당하게 얼굴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²¹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거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파트너십이라고 표현.

²² Civil union : 시민결합 또는 생활동반자관계로 불리며, 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이다.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세제, 보험, 의료, 입양, 양육 등의 법적 이익이 일부 혹은 온전히 보장된다. 시민결합 제도는 국제적으로 확고히 정해진 기준과 규격이 없기 때문에 명칭 또한 언어, 국가, 지역, 법안별로 상이하다. 본래 20세기 말 LGBT인권의 신장과 함께 사회의 동성결혼 허용 요구에 대한 정치적 대체제로서 탄생하였으며, 지금은 종종 동성결혼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 또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²³ Volker Beck

메르켈 총리는 의회 토론에서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는데, 그 중 가장 날이 선 것은 사회민주당 요하네스 카스²⁴ 의원의 비판이었다. 그는 메르켈 총리가 수년간 동성 결혼 합법화를 막았던 것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메르켈 총리에게 하나도 안 고맙다”고 말했다.

유럽의 동성결혼/시민결합 현황

■ 동성결혼 합법화 ■ 시민결합 합법화 ■ 동성결혼/시민결합 비인정



Guardian graphic | 출처: ILGA.ORG

지난 6월 26일 저녁, 베를린의 막심 고리키 극장에서 열린 여성잡지 브리기에²⁵가 주최한 좌담회가 이번 표결의 도화선이 되었다. 언론인이자 행사기획자인 울리 코페²⁶가 청중석서 메르켈 총리에게 “나의 남자친구를 남편으로 부를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요?”라고 질문하자, 메르켈 총리는 질의응답 시간 막바지에 8분 동안 동성 결혼에 대해 이야기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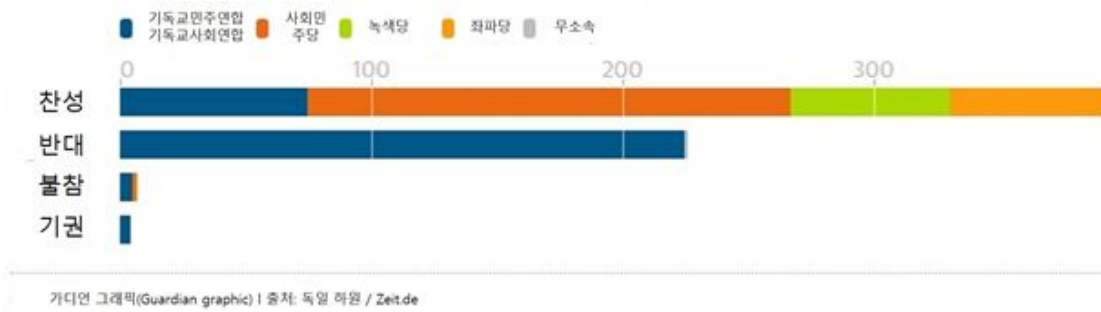
메르켈 총리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시간 동안 고민 했고, 동성 파트너십은 이성간 결혼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따른 문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²⁴ Johannes Kahrs

²⁵ Brigitte

²⁶ Ulli Köppe

동성 결혼 법안에 대한 정당별 투표 결과



이어서 메르켈 총리는 독일 발트해 연안 지역 내 자신의 선거구에서 레즈비언 커플을 만나면서 겪은 “인생이 바뀌는 경험”에 대해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동성 결혼에 대한 개인적인 “난제”가 아이들의 복지 문제임을 그 커플에게 이야기 했다.

파트너인 크리스틴²⁷과 오랫동안 함께 살며 다섯 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군둘라 침²⁸은 메르켈 총리를 집으로 초대해 아이들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 만남으로 마음이 변했다고 말한다. 당국이 이 커플이 충분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폭력이 일반화된 남녀 부모로 구성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보다 동성 커플 가정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다고 국가가 간주한다면 나는 이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에 대해 판단할 때 이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메르켈 총리는 박수를 받으며 말했다.

사회민주당은 이번 메르켈 총리의 180도 입장 변화를 하계 휴회기간과 9월 24일 선거를 앞두고 동성 결혼 법안을 빠르게 표결에 부칠 기회로 보았다. 메르켈 총리의 보수 연합 의원들은 이러한 행보를 무시했고, 표결 이후에는 사회민주당이 이 안건을 하원에 밀어붙였다고 비난했다.

브리기타 좌담회에서 메르켈 총리에게 동성 결혼에 대해 질문을 했던 코페(28세)는 사실상 그가 일으킨 논쟁의 결과를 기다리며 하원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내 질문은 즉흥적이었고,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청중들이 질문을 하지 않아서 마이크를 잡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코페는 메르켈 총리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모호한 답”을 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상세한 답변에 놀랐다. 그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질문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제 코페는 12년 간 함께한 파트너와 결혼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시민결합만이 가능했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군둘라 침은 하원 토론을 TV로 시청했고, 메르켈 총리가 반대표를 던진 것에 “매우

²⁷ Christine

²⁸ Gundula Zilm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결과를 보고 축하했다. 군둘라 침은 “메르켈 총리가 반대표를 던져 매우 유감이었지만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나갔다”고 말했다. 군둘라 침과 크리스틴은 이미 시민 결합 상태였고, 이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 그들은 결혼식에 메르켈 총리를 초대할 것이라고 한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 되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 올해가 가기 전 발효될 것이다. 녹색당 레나테 쿠나스트²⁹ 의원은 전국 등기소에 몰려드는 혼인신고 부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²⁹ Renate Künast

영국, 긴축재정에 저항하는 흐름이 강해지다

(맨위로)

글 : 사이먼 버틀러³⁰

번역 : 황정은(사무국장, ISC)

* 본 기사는 그린 레프트 위클리(Green Left Weekly)의 “In Britain, there's a sense of a growing rebellion against austerity (<https://www.greenleft.org.au/content/britain-theres-sense-growing-rebellion-against-austerity>)”를 번역한 글입니다.



글래스톤베리에서 연설중인 제레미 코빈

그 누구도 글래스톤베리 음악축제에서 68세 사회주의자가 [200년 전에 쓰여진 시](#)를 암송하는 것이 가장 화제가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6월 24일 글래스톤베리에서 노동당³¹ 대표 제레미 코빈³²의 연설에 축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영국 음악주간지 [NME](#)³³는 전했다.

6월 8일 선거 이후 영국 정치권에 또 다시 변화가 생겼다.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보수당³⁴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은 2015년 선거에 비해 지지율이

³⁰ Simon Butler: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 있는 그린 레프트 위클리의 해외통신원

³¹ Labour

³² Jeremy Corbyn

³³ New Musical Express는 1952년에 창간된 영국의 음악 주간지이다.

³⁴ Conservatives

10퍼센트 포인트 올랐다. 이러한 변화에는 특히 런던에서 발생한 [그렌펠타워³⁵ 화재](#) 당시 정부의 직무태만에 대중이 격렬하게 분노한 데에 그 핵심이 있다.

긴축정책에 대한 저항이 생겨났고 열성적인 군중과 활발한 시위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빈 대표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보수당의 테레사 메이³⁶ 총리는 현재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낼 때마다 야유와 조롱이 따르는 것 같다.

메이 총리가 그렌펠 화재 희생자들과의 대화를 위해 뒤늦게 나타났을 때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응으로 쫓겨났다](#). 심지어 6월 24일 리버풀³⁷에서 열린 연례 국군 가두행진³⁸에 메이 총리가 참석했을 때 [일부 군중이 야유를 퍼부었다](#).

현재 노동당은 선거에서 계속적으로 보수당을 앞서고 있고 코빈 대표는 처음으로 선호하는 총리 후보가 되었다. 패널베이스³⁹가 6월 16일부터 21일 사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은 46%, 보수당은 41%의 지지율을 받았다.

한편 6월 10일 서베이션⁴⁰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이 45%, 보수당이 39%의 지지율을 받았다. 일주일 후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이 3 퍼센트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다.(노동당 44%, 보수당 41%)

최근 패널베이스는 메이 총리와 코빈 대표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묻는 또 다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45%가 코빈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28%만이 메이 총리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민주연합당과의 연정

보수당이 북아일랜드 극우보수정당인 민주연합당(DUP)⁴¹과의 연정의 대가로 [15억 파운드\(약 2조 2000억원\) 지원을 약속한 이 거래](#)는 메이 총리의 추락하는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³⁵ Grenfell Tower

³⁶ Theresa May

³⁷ Liverpool

³⁸ Armed Forces Parade

³⁹ Panelbase

⁴⁰ Survation

⁴¹ Democratic Unionist Party

민주연합당이 국회에서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을 보장하는 대가는 영국 내 모든 자치구 타워블록⁴²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12억 파운드(약 1조 7천억원)**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다. 메이 총리는 현재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보수당 의원들은 최근 예산 삭감에 영향을 받는 소방관과 같은 응급서비스 노동자들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부문의 임금 동결을 해제하라는 노동당의 제안을 부결시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분노를 자아냈다.

또한 보수당과 민주연합당의 연정은 북아일랜드에서 진행중인 불안정한 평화 협상 과정에도 위협이 된다.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6개 아일랜드 자치주로 구성되어 있다.

“더 트러블스⁴³”로 알려진 수십 년 동안의 폭력적인 분쟁을 끝내기 위해 1998년 체결한 성금요일협정⁴⁴에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공동체의 정치 대표와 친영국 통합주의자 간에 권력을 공유하는 협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최대 통합주의자 그룹인 민주연합당과 아일랜드 공화국 정당인 신페인당⁴⁵의 공동 정권은 무너졌다. 신페인당은 평등과 민주연합당이 연루된 공적자금 횡령 스캔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동 정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러한 교착 상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보수당과 민주연합당과의 연정은 협상에서 “중립적 중재자”를 자임한 영국 정부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또한 민주연합당은 “하드 브렉시트⁴⁶”를 주장하지만, 신페인당은 북아일랜드 다수가 브렉시트를 반대함에도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게리 아담스⁴⁷ 신페인당 대표는 민주연합당-보수당 연정은 “**성금요일 협정을 위협**”하고 북아일랜드의 정치적 위기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선거 요구

⁴² 고층 아파트를 의미하며, 공공주택의 성격을 가진다. 1960~70년대 노동계급의 주거 문제 해결책으로 건설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흉물처럼 되어갔으며, 가난의 상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⁴³ “the Troubles”: 아일랜드 공화국이 영국 연합왕국에서 독립할 당시 얼스터의 일부 지방은 영국에 남음으로써 비롯된 일련의 민족주의 분쟁을 말한다. 1960년대 말에 시작되어 1998년 벨파스트 협정으로 마무리되었으나 협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산발적 폭력으로 점철되었다.

⁴⁴ Good Friday Agreement: 1998년 4월 10일 영국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체결된 평화 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된 날이 부활절 이틀 전인 성금요일(Good Friday)이었기 때문에 성금요일 협정(Good Friday Agreement)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⁴⁵ Sinn Fein: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

⁴⁶ hard Brexit: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란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 완전한 탈퇴를 뜻하고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란 유럽연합에서는 탈퇴하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은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⁴⁷ Gerry Adams

보수당-민주연합당 연정은 불안정하며 잘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많은 비평가들은 몇 달 내에 조기 총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동당 그림자내각 재무장관⁴⁸이자 코빈 대표의 조력자인 존 맥도넬⁴⁹은 노동조합과 지지자들에게 7월 1일 런던에서 열리는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민중모임](#)⁵⁰ 행진에 “100만”명의 참가자를 조직할 것을 요청했다. 이 행진에서는 보수당의 소수 정부가 추진하는 반민중 의제에 반대하고 새로운 선거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에 우호적인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보수당과 코빈 대표의 진보 정치와 오랫동안 아일랜드 독립을 지지해온 입장을 경멸하는 민주연합당은 새로운 선거를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보수당 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보존 본능과 함께 기득권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줄지와는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민주연합당과 연정을 유지하라는 압력이다.

위협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글래스톤베리에서 코빈 대표의 연설](#)은 군중의 환호와 박수로 여러 번 중단 되었다. 이날 코빈 대표가 가장 많은 환호를 받았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면, 장벽이 아닌 다리를 건설하라는 것”이라는 발언이었다.

코빈 대표는 이어 “정치는 사실 일상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정치는 우리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지난 7주간 진행된 선거 운동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전문가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엘리트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끌면서 정말 자랑스러웠던 멋진 선거운동으로 많은 민중이 정치에 다시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중이 정치가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고무적이었던 것은 처음으로 정치에 참여한 청년의 수입니다.”라고 말했다.

코빈 대표는 청년은 “자신들이 폄하되는 것에 질렸고, 자신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를 듣는 것에 질렸고, 그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듣는 것에 질렸고, 청년 세대가 의료, 교육, 주택, 연금과 모든 것을 위해 더 많이 지불하고 적게 받는다고 듣는 것에 정말 질렸다. 청년들은

⁴⁸ Shadow Chancellor: 그림자 내각은 주로 영국식 웨스트민스터 체제 의원 내각제에서 제1야당 소속의 당원들로 구성된 부차적인 내각이다. 그림자 내각은 제1야당의 당수가 이끌며 그 밑의 원로 당원들이 여당의 내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제1야당이 여당으로 승격 할 때에 그림자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은 대체로 새로운 내각의 장관으로 임명된다. 그러므로 그림자 내각의 역할은 내각이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의 정책과 행동을 비판 또는 여당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⁴⁹ John McDonnell

⁵⁰ People's Assembly Against Austerity

낮은 임금을 받아 들어야 하고, 불안정함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삶의 일부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에 질렸다”고 말했다.

“글쎄요,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많고’

코빈 대표는 새로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정치는 다시는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사회와 삶에서 기존과는 많이 다른 무언가를 요구했고, 그것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빈 대표의 발언 중 가장 크고 긴 박수가 터져 나왔던 부분은 코빈 대표가 퍼시 비시 셸리⁵¹의 [1819년 시 혼돈의 가면극](#)⁵²에서 유명한 시구를 암송했을 때였다. 이 시구는 노동당의 선거 구호인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하여”와도 일맥상통한다.

코빈 대표는 시구를 암송했다. “잠에서 깨어난 사자처럼 일어나라/물리칠 수 없는 수로/땅에 묶인 사슬을 떨쳐 버려라/잠에 든 네 위에 떨어진 이슬처럼/너희들은 많고 그들은 적으니.”

코빈 대표는 축제 참가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한다면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두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진 힘을 알아야 한다”고 요청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⁵¹ Percy Bysshe Shelley

⁵² The Masque of Anarchy

RCEP가 식량과 농민에 미치는 영향

(맨위로)

글: 그레인

번역: 홍정희(번역팀, ISC)

RCEP가 식량과 농민에 미치는 영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 개국의 메가톤급 역내 무역협정이다. RCEP가 타결되면, 역내 식량의 80 %를 생산하는 4 억 2 천만 소규모 가족농을 포함,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RCEP는 이 지역의 식량과 농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토지의 점령

- 2008 년 이후 RCEP 회원국에서만 960 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의 주인이 바뀌었다. 두 개의 RCEP 조항이 토지 접근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유출 된 투자 조항에서는 각 정부가 다른 RCEP 회원국 국민의 투자자에게 국내 투자자와 똑같은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대부분의 RCEP 회원국은 외국인이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서비스 조항 또한 외국인인 서비스 관련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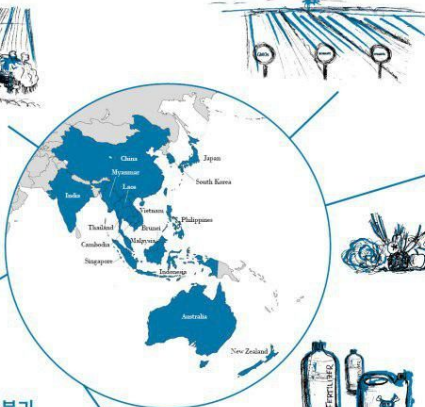


소규모 낙농업자 및 기타 업종 농민의 붕괴

- RCEP는 시장 개방을 통해 소규모 생산자를 밀려, 호주, 뉴질랜드처럼 보조금이 많은 생산 지역의 공공 경쟁으로 내몰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인도의 1 억 명에 달하는 소규모 낙농업자 출신업자들은 특히 취약하다.
- 인도와 뉴질랜드 양국 간 무역 협정이 인도 정부의 강력한 태도 때문에 제지되지 못한 가운데,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국인 뉴질랜드 대농업 대기업 콘데라는 인도에 밭을 들어 농기 위해 RCEP를 이용하려 한다. 사람들은 인도 낙농가가 콘데라에 종사하거나 낙농업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한다.
- RCEP는 소규모 생산 및 가공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식품 안전 기준을 가진 일본과 호주와 같은 국가에 식량을 공급할 용도의 메가 푸드 파크 설립을 장려 할 것이다. 이러한 최첨단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공급망은 소규모 생산자와 가내 직물가공 사업을 대체하고 이들을 도시와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레인(GRAIN)은 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도움을 주신 아시아 태평양 여성, 법률, 개발에 관한 모임, 아시아농연합, 제3세계네트워킹에 감사드립니다.



비료와 농약 사용의 증가

- RCEP 무역 장벽들은 무역 상품의 65 %를 무관세로 국가 인화하기로 약속했다. 아시아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농약도 한 예로 인화 조치가 예상될 수 있다.
- 전 세계 농약 시장의 2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농약 회사인 신진타 플 인수함으로써, 중국은 RCEP로부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미 2017 년 1 월에 중국은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의 인 비료를 대한 수출 관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유출 된 지적 재산권 조항이 채택되면, RCEP가 수의약품, 농기계, 미생물 기반 제품, 농약 등 여러 부류에 대한 특허권을 놓고 특허 기간을 연장해서 더 비싼 비용을 내고 사용자 도둑 만들 것이다.



종자의 민영화와 GMO 급증

- 오늘날의 세계 종자 산업은 3 개의 회사가 전 세계 종자 판매 60 %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장 집중도가 매우 높다.
- RCEP 지적 재산권 조항의 유출된 초안을 보면 모든 RCEP 회원국은 "UPOV 1991"을 채택해야 한다. 국제식물신제품보호협약(UPOV)은 농민들이 보호 품종의 종자를 저장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설사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은 농장에 저장하는 종자에 대해 종자 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일반 상업용 종자 가격의 10-40 %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아시아에서는 현지 종자 가격이 200 - 600 % 인 상될 수도 있다.
- RCEP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협상 된 내용을 근접하게 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 될 것이다. TPP 회원국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를 의미하는 "식물로부터 파생된" 설명에 대한 특허를 허용해야 한다.

대형 할인점의 현지 시장 초토화

- 유출 된 초안에 따르면, RCEP 서비스 조항은 정부가 다른 RCEP 회원국에서 진출한 대형마트 제 1 인의 운영을 제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TPP에서의 선례를 따를 경우, 연내 공급량과 원자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RCEP 조항에 따라 'ICT 농업(농장 운영 관리를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사용)의 강화 될 수 있다.
- RCEP는 회원국 정부가 알려야 하지만 모든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에 "현지 생산"을 세우도록 요구하거나 식량을 현지 생산자로부터 조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금 행동에 나서자

아니면 모든 변하는 기업이 아시아의 식량과 농업 분야를 침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해를 막으려면 RCEP를 개정 할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다. RCEP는 기업의 농업 분야에 의존하고, 그러한 행위를 추구하는데, 이는 아무리 조항을 개정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행세, 우리는 사람 중심의 식량 및 농업 시스템을 활성화 하도록 하는 정책과 개혁을 구현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러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 정책의 세울 수 있다. 그 반대는 아니다.

- 지역 사회에서 RCEP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와 토론을 조직하자. <http://bilaterals.org/rcep>는 공개적 피드백 사이트로, 알고하면 좋다.
- RCEP를 중단하라는 민중의 요구를 지지하고, 기업 엘리트가 아닌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운동 무역개혁 설립을 위한 투쟁에 나서자. 이러한 것에 등장하는 국내 단체들에 연락하여 힘을 모으자.
- RCEP 회의를 참석하자. RCEP 회원국 국민의 생계에 리 협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분석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협상 내용 공개를 요구하자. 지난 몇 개월 동안 미스, 자카르타, 고베, 마닐라에서 단체들이 그랬 듯, 우리의 우려를 표명하자. 다음 협상은 인도의 하이데라바드(2017 년 7 월)와 한국의 서울(올해 말)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 RCEP 및 무역 정위에 대한 역내 전체 차원의 민중 캠페인에 참여하고 역내 행동의 날과 같은 집단적 행동을 함께 하자.
- 유출 된 내용과 RCEP 조항 분석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rcep4legal.wordpress.com/>, <http://keionline.org/>, <http://www.bilaterals.org/rcep-leak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6 개국의 메가톤급 역내 무역협정이다. RCEP가 타결되면, 역내 식량의 80 %를 생산하는 4 억 2 천만 소규모 가족농을 포함,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RCEP는 이 지역의 식량과 농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종자의 민영화와 GMO 급증

- 오늘날 세계 종자 산업은 3 개의 회사가 전 세계 종자 판매 60 %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장 집중도⁵³가 매우 높다.
- RCEP 지적 재산권 조항의 유출된 초안을 보면 모든 RCEP 회원국은 "UPOV 1991"을 채택해야 한다. 국제식물신제품보호협약(UPOV)은 농민들이 보호 품종의 종자를 저장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설사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은

⁵³ 특정 시장/산업에서 경쟁의 제한 또는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계량화한 수치

농장에 저장하는 종자에 대해 종자 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일반 상업용 종자 가격의 10-40 %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아시아에서는 현지 종자 가격이 200 ~ 600 % 인상될 수도 있다.

- RCEP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협상 된 내용에 근접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 될 것이다. TPP 회원국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를 의미하는 "식물로부터 파생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허용해야 한다.

토지의 점령

- 2008 년 이후 RCEP 회원국에서만 960 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의 주인이 바뀌었다. 두 개의 RCEP 조항이 토지 접근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유출 된 투자 조항에서는 각 정부가 다른 RCEP 회원국 국적의 투자자에게 국내 투자자와 똑같은 농지 구매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대부분의 RCEP 회원국은 외국인이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서비스 조항 또한 외국인이 서비스 관련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형 할인점의 현지 시장 초토화

- 유출 된 초안에 따르면, RCEP 서비스 조항은 정부가 다른 RCEP 회원국에서 진출한 대형마켓 체인의 운영을 제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TPP의 선례를 따를 경우, 역내 공급망과 전자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RCEP 조치에 따라 'ICT 농업'(농장 운영 관리용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사용)이 강화 될 수 있다.
- RCEP는 회원국 정부가 알리바바⁵⁴나 이온⁵⁵과 같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에 '현지법인'을 세우도록 요구하거나 식량을 현지 생산자로부터 조달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소규모 낙농업자 및 기타 업종 농민의 붕괴

- RCEP는 시장 개방을 통해 소규모 생산자를 일본, 호주, 뉴질랜드처럼 보조금이 많은 생산자와의 불공정 경쟁으로 내몰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인도의 1 억 명에 달하는 소규모 낙농업과 축산업자들은 특히 취약하다.
- 인도와 뉴질랜드 양국 간 무역 협정이 인도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체결되지 못한 가운데,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국인 뉴질랜드 낙농업 대기업 폰테라⁵⁶는 인도에 발을 들여 놓기 위해 RCEP를 이용하려 한다. 사람들은 인도 낙농가가 폰테라에 종사하거나 낙농업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한다.
- RCEP는 소규모 생산 및 가공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식품 안전 기준을 가진 일본과

⁵⁴ Alibaba: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⁵⁵ Aeon: 일본 유통업체

⁵⁶ Fonterra

호주와 같은 국가에 식량을 공급할 용도의 메가 푸드 파크⁵⁷ 설립을 장려 할 것이다. 이러한 최첨단 “농장에서 식탁까지⁵⁸”의 공급망은 소규모 생산자와 가내 식품가공 사업을 배제하고 이들을 토지와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비료와 농약 사용의 증가

- RCEP 무역 장관들은 무역 상품의 65 %를 무관세로 즉각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아시아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농약도 관세 인하조치의 대상품목이 될 것이다.
- 전 세계 농약 시장의 2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농약 회사인 신젠타⁵⁹ 를 인수 함으로써, 중국은 RCEP로부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미 2017 년 1 월에 중국은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질소와 인 비료에 대한 수출 관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유출 된 지적 재산권 초안이 채택되면, RCEP가 수의약품, 농기계, 미생물 기반 제품, 농약 등 여러 투입물에 대한 특허권을 늘리고 특허 기간을 연장해서 더 비싼 비용을 내고 사용하도록 만들 것이다.

지금 행동에 나서자!

이러한 모든 변화는 기업이 아시아의 식량과 농업 분야를 점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해결책은 RCEP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다. RCEP는 기업적 농업 방식에 의존하고, 그러한 방식을 추구하는데, 이는 아무리 조항을 개정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우리는 사람 중심의 식량 및 농업 시스템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정책과 계획을 구현해야한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러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 정책을 세울 수 있다. 그 반대가 아니라.

- 지역 사회에서 RCEP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와 토론을 조직하자. <http://bilaterals.org/rcep>는 공개적 퍼블리싱⁶⁰ 사이트로, 참고하면 좋다.
- RCEP를 중단하라는 민중의 요구를 지지하고, 기업 엘리트가 아닌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중심 무역체제 설립을 위한 투쟁에 나서자. 이러한 것에 동참하는 국내 단체들에 연락하여 힘을 보태자.
- RCEP 회의에 참석하자. RCEP 회원국 국민의 생계에 이 협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분석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협상 내용 공개를 요구하자. 지난 몇 개월 동안 퍼스, 자카르타, 고베, 마닐라에서 단체들이 그랬듯, 우리의 우려를 표명하자. 다음 협상은 인도의 하이데라바드(2017 년 7 월)와 한국의 서울(올해

⁵⁷ Mega food park: 거대 식품공업단지. 식품가공, 콜드저장, 물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⁵⁸ Farm-to-fork

⁵⁹ Syngenta

⁶⁰ Open publishing: 독자들에게 공개된 형태의 뉴스 제작과정 혹은 콘텐츠 내용. 독자가 내용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을 통해 즉시 열람 가능. (예: 위키피디아)

말)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 RCEP 및 무역 정의에 대한 역내 전체 차원의 민중 캠페인에 참여하고 역내 행동의 날과 같은 집단적 행동에 함께하자.
- 유출 된 내용과 RCEP 조항 분석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rceplegal.wordpress.com/> <http://keionline.org/> <http://www.bilaterals.org/rcep-leaks>

3. 변화의 물결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선거를 앞두고

(맨위로)

허석렬(자문위원, ISC)



국제전략센터는 7월30일 제헌의회 선거를 앞두고 주한베네수엘라 대사관을 방문해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제헌의회 선거를 지지하는 활동을 함께 하였다. “그때! 가자 제헌의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지지 선언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베네수엘라로 전달하였다. (사진: 주한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대사관)

2013년 3월 볼리바리안 혁명을 이끌었던 차베스 대통령이 서거한 것은 베네수엘라 인민만이 아니라 그가 주창한 21세기 사회주의에 공감하였던 전세계의 진보적 지식인, 인민들에게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그러나 곧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새로 선출된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시작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에 기초한 볼리바르 혁명 과정을 진행하는 데 온 힘을 다하였다.

그러나 반대파는 마두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볼리바르 혁명과정을 종식시키고 민중이 거부했던 과두 지배체제를 복원하려는 공작을 꾸미고 대중시위를 가장한 폭력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불안정화시키려 하였다.

2015년 12월 경제위기를 틈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우익중심의 반대파는 그 기세를 몰아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두로 대통령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몰아내려 기도하였다.

마두로 정부는 총선에서의 패배원인을 반성하고 민중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반대파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 정치와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우익 반대파는 이런 호소를 무시하고 생필품의 공급을 방해하는 등

마두로정권에 대해 경제전쟁을 더욱 확대하고 인명이 희생되는 폭력시위를 벌임으로써 마두로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쿠데타를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존의 볼리바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제헌의회 구성을 발의하였으며 7월30일 제헌의회 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다수의 국민은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제헌의회 구성에 찬성하고 있으며 제헌의회 의원 후보 등록도 노동조합과 다른 시민사회 조직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우익반대파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성공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7월 30일 선거날,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우익세력의 총공세가 예상되며 미국 정보기관이 우익세력의 국가전복 음모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언론은 다른 서방의 기업언론과 마찬가지로 마두로 정권의 악마화에 동원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여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 제헌의회 선거는 베네수엘라 인민의 발의에 의해 주도되는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으로 그 어떤 외국세력도 그 과정을 방해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개입한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1970년 대 칠레에서 일어났던 우익 파시즘이 재현될 것이다. 그 점에서 마두로 대통령과 우익반대파를 등거리에서 비판하는 것은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베네수엘라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마두로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볼리바리언 혁명세력을 방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전세계 진보적 인민의 사명일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진실을 알리고 베네수엘라의 제헌의회 구성을 지지하는 데 한국의 진보세력도 동참할 것이다.

4.국제뉴스

[라틴아메리카] 세계 민중대회 선언문 : 보편적 시민권을 향한 국경 없는 사회를 위하여

(맨위로)

번역 : 배경진 (국제팀, ISC)

심태은 (The 숲 한글판 편집장, ISC)

* 본 기사는 더 던 뉴스(The Dawn News)의 Bolivia: Final Statement at the World Conference of the Peoples – “For a World Without Borders towards Universal Citizenship”(http://www.thedawn-news.org/2017/06/23/bolivia-final-statement-at-the-world-conference-of-the-peoples-for-a-world-without-borders-towards-universal-citizenship/)를 번역한 글입니다.



(출처 : 텔레수르)

지난 6월 19-20일 양일 간 볼리비아 수도 라 파스⁶¹에서 400킬로미터 떨어진 띠끼빠야⁶²에서 보편적 시민권을 향한 국경 없는 세계를 위한 세계 민중대회가 열렸다. 아래는 대회 최종 성명서이다.

띠끼빠야에 모인 전 세계의 사회운동진영,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의 증언을 듣고, 우리의 역사적 기억과 다양한 정체성에 기반한 집단적 토론을 한 후, 소위 ‘이주 위기’와 관련하여 각국과 국제사회에 우리의 비전과 제안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⁶¹ La Paz

⁶² Tiquipaya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우리 세계민중은 더 큰 힘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상호보완성, 공정 연대에 기반한 개인과 민중 간 관계 수립: 사적 단체의 영리나 투기 목적이 될 수 없는 기초 서비스와 근본적 권리로에 대한 접근성의 인정과 보편화과두제, 왕정, 군주제 그리고 기타 정치 계층을 초월하는 공공 정책의 구체화와 실행에서 시민참여 확대

다국적 유기조직체가 초국가적 자본에 복무하지 않고, 천연 자원의 사회적 특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금융구조

어머니 지구와의 조화로운 공존과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대한 존중, 자연은 인간 없이 살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의 권리를 침해하고 서식지를 파괴하면서도 자연 없이는 살 수 없다.

적대적 갈등 철폐뿐만 아니라 부와 발전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막는 구조적 폭력도 극복하는 영구적이고 진정한 평화 구축

우리는 적대적 갈등과 군사적 개입, 기후변화와 국가간, 그리고 각 국가 내에서의 거대한 경제적 불평등을 이 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확인했다. 이러한 파괴적인 상황들은 폭력을 발생시키고, 불평등을 촉진하고, 이윤과 자원을 찾기 위해 어머니 지구를 파괴하는 지배적인 세계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주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이다.

인간의 이동성은 평등의 본질에 기반한 권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동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강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일어난다. 터전에서 쫓겨난 고통에 더해 이주민은 부당함, 배제, 차별 그리고 착취를 겪고, 수용국가에서 그들의 존엄과 기초적 인권,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향한 공격 또한 받게 된다.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이 장악한 패권적 발언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부추기고, 이들이 경제, 인구통계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수용국가에 기여한 측면을 가린다. 우리는 민중 간의 협력을 저해하고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을 가하는 신식민주의적이고 편협하며 외국인 혐오적인 입장의 출현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입장들은 사회·환경적 빛의 채권자인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전제로 세계권력의 중심과 세계불평등, 기후변화 및 구조적 폭력의 주요 책임이 있는 세력의 지지를 통해 유지된다. ,

따라서, 사회적 기반을 구성하는 우리는 다음의 제안을 통해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동등한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민권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1. “정상적이고 안전하며 질서정연한” 방식의 이주 관리를 부추기는 패권적 관점의 이주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이주민을 “수용하고, 보호하며 이주를 장려하고 이주민을 사회에 통합하는” 인류애적인 비전을 도입할 것이다.
2. 안보와 통제라는 거짓된 초점을 통해 이주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거부한다. 특히, “이주민 수용소”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사람들을 갈라놓는 물리적 장벽, 이주민을 괴롭히고 범죄자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법적 장벽, 공포, 차별, 외국인 혐오를 이용해 우리를 형제들로부터 분리하려는 정신적 장벽을 모두 파괴할 것을 촉구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주민에게 낙인을 찍거나 부적격자로 간주하는 언론 장벽도 규탄하며, 대안 언론 채널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3. 이주민, 난민, 인신매매 희생자 등의 권리를 위한 세계 공공 민중 수호기구를 설립하여 자유로운 이동과 인권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볼리비아 민중과 정부에 세계 민중대회 선언문 내 결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율 기구의 설립을 관장할 것을 요청한다.

4. 보편적 시민권 도입의 첫 단계로, 지역 내 이동권과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는 역내 시민권을 신설 또는 강화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한다.
5. 전쟁과 이주민 범죄자화에 투입되던 공공재정을 이주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신설에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
6. 상호보완성, 연대, 형제애, 다양성의 원칙 하에 도시와 사회가 더욱 더 차별이 없는 곳으로서 이주민이 그 사회에 효과적으로 융합되고 거주, 보건, 교육, 사회보장제도에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7. 인신매매 범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공동 전선을 펼치고, 인신매매와 노예매매가 인류에 대한 범죄임을 선언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를 소집할 것이다.
8. 이주민, 난민 및 이들의 가족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다각적 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국제적 수단들을 갱신, 강화 및 발전을 촉구한다.
9. a)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⁶³ – 북반구의 난민 수용국가에서 아직 이 협약이 비준되지 않았다.

⁶³ International Convention on rights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 10. b) 유엔난민기구(UHCR) 난민 지위에 관한 협정에 전재 난민과 기후 난민 개념 추가
- 11. c) 2018년 유엔에서 세계 협약⁶⁴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12. d) 유엔 총회에서 ‘보편적 시민권을 향한 국경 없는 세계 10년’을 설정하도록 요구
- 13. 국경이 사람들 간의 통합을 위한 교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난민을 환영하며, 초국가적 조직 범죄와의 투쟁이 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비전을 가지고 “삼엄한 국경” 전략을 극복할 것을 촉구한다.

(거주지의) 이동이 빈곤, 폭력,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주민이 출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의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하고, 거주민이 출신 지역에서 영구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 14. 전 세계적 차원의 이동을 촉진하여 국내외적으로 인간의 이동권이 가지는 양도불가능한 특성이 인정받도록 하고, 그를 통해 일방적으로 불평등과 사회적 부당함을 영속화하는 모든 장벽, 장애물, 개입을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

⁶⁴ World Pact

[일본] 가케(加計)학원 문제 등의 본질: 공문서 관리와 정치주도·간부인사의 형식을 재고한다

(맨위로)

글 : 오구로 가즈마사⁶⁵

번역 : 이로미 (국제팀, ISC)

* 본 기사는 언론 플랫폼 아고라(言論プラットフォーム アゴラ)의 “加計問題等の本質：公文書管理や政治主導・幹部人事のあり方を再考する” <http://agora-web.jp/archives/2027438.html>를 번역한 글입니다.



이번 가케(加計)학원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사건은 유아무야 넘어가기 어려운, 적어도 세 개의 커다란 문제를 부각시켰다. 첫째는 ‘공문서 관리 방식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는 ‘암반규제⁶⁶를 타파하는 정치주도의 방식에 관한 문제’이고, 셋째는 ‘내각 인사국의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일본 통치기구의 방식과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필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이며, 여당과 야당을 포함한 어떠한

⁶⁵ 小黒 一正. 일본의 경제학자. 전 대장성(재무성)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주임연구관, 히토쓰바시 대학(一橋大学) 경제연구소 조교수, 호세이 대학(法政大学) 경제학부 교수.

⁶⁶ 岩盤規制, 단단한 암반에 비유되는 규제법안

입장도 지지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일본 통치기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큰 문제와 깊이 관여하는 입장에서 차례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1988년 리쿠르트 사건⁶⁷과 1989년 버블붕괴 이후, 일본은 정치 부패의 척결이나 산적인 정책 과제 해결을 목표로 총리와 총리실의 정치 리더십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선거제도와 통치기구의 개혁을 거듭 단행했다.

그 상징이 양당제를 지향할 목적으로 실현시킨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도입(1994년에 법안 통과)이나 경제 재정 자문 회의의 창설과 내각 기능의 강화를 목표로 실행한 2001년 중앙 부처 재편 등이다.

애초에 일본 통치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에 비해 총리와 총리실이 강한 권력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다. 그러나 이전의 중선거구제에서는 여당 안의 파벌이나 족의원⁶⁸이 강한 정치권력을 차지하여 재정과 사회보장의 근본적 개혁은 부진했고, 총리와 총리실은 정치적 리더십을 도모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여소야대에 의한 국정 파행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통치기구의 개혁이 불가결하다는 논의가 영향력을 얻었고, 총리와 총리실로 권력을 집중시켜 산적인 정책 과제부터 해결하자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그 결과 의원내각제와 소선거구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이 융합하여 총리와 총리실은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다. 현 아베 정권에서는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인 재정과 사회보장 개혁의 진척이 늦어지는 것을 커다란 문제로 여기고 있는데, 필자의 사견으로는 권력 집중화라는 방향성은 타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의 역사』와 『프랑스 혁명 강의』 등을 쓴 영국 역사가이자 사상가이기도 한 존 액튼 경⁶⁹이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 권력이 부패할 가능성을 전제로 할 때, 권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라는 거버넌스(통치방식) 역시 중대 과제이며, 권력 제어를 책임질 사람은 최종적으로 일본의 주권자인 국민, 즉 우리이다.

의원내각제 아래에서는 국회의 다수당인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내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므로 일본의 최종적인 주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책 형성 프로세스를 포함한 정보의 양과 질이 중요한 열쇠이다.

정보의 양과 질과 깊게 관련된 것이 첫째, 공문서 관리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본디 현행

⁶⁷ 일본의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를 포함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리쿠르트 계열사의 미 상장주식으로 막대한 차익을 챙긴 뇌물수수 사건

⁶⁸ 族議員,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

⁶⁹ Sir John Dalberg-Acton

공문서 관리법은 일본 역사적 흐름을 미래의 자산으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지극히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제정을 주도한 사람은 자민당의 후쿠다 야스오⁷⁰ 전 총리이다. 이 법은 2009년에 제정되어 2011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공문서 관리법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공문서 관리법 제1조(목적)에 기재되어 있다. 국민 주권 이념에 부합하고,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뒷받침하는 국민 공유의 지적 자원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얻어 민주주의적인 판단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육상자위대의 남수단 PKO파견부대 일지를 포함한 외교와 안전보장 등의 공문서는 현재와 미래의 국민이 일본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귀중한 자산이다.

그럼에도 공문서 관리법 제7조에서는 행정문서 보존에 담당 행정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존기한 1년 미만인 행정문서를 행정문서 파일 관리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었고,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하면 동 법률 8조와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문서의 폐기와 심사 청구 면제가 가능하도록 법이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보존기한 1년 미만인 행정문서로 지정하면 그 문서의 작성과 폐기도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블랙박스’가 되고 만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귀중한 자산(공문서)의 일부가 폐기되는 것이다.

일례로, 시사잡지 슈칸분슌⁷¹ 2017년 6월 15일자에서 후쿠다 전 총리는 “아베 정권에서는 공문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리토모⁷² 건이나 가케 건도 마찬가지다.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 만든 법률을 폐지의 근거로 삼고 있다. 관료도 어디에 맞추어 일을 하는가? 국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공문서 관리법은 1999년에 제정된 행정기관 정보 공개법과 대척점을 이룬다. 공문서 관리가 유명무실화되어 중요한 공문서가 폐기된다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기반 중 하나인 정보 공개법의 의의도 저하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문서의 보존 담당 행정관의 부담이 높아지지만, 예컨대 행정문서 작성과 파기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1년 미만의 보존 기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보존기한 1년 미만인 행정문서의 지정요건을 법적으로 엄격히 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조직이 공문서 관리의 외부 점검을 수행하는 조직을 창설하는 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어서 둘째, ‘암반규제를 깨부술 정치주도 형식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일본이 직면한 가장

⁷⁰ 福田康夫

⁷¹ 週刊文春

⁷² 森友.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연루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을 말한다.

강고한 암반은 연금·의료 등의 사회보장 관계 암반이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법인 가계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을 국가전략특구에서 인정하기에 이른 정책결정 프로세스에 관한 경위이다. 이 문제는 개별성이 대단히 강한 사안이다.

이는 국가전략특구라는 틀로 한정된 지역에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제도의 목적상 불가피한 면도 있다. 그러나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쥔 총리와 총리실은 개별 프로젝트의 결정에는 가능한 한 관여하지 않고, 부처 간 수평적 정책 조정을 포함하여 확실하면서도 더욱 일반성 높은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광역적으로 수의학부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신설을 인정한다’는 조건 하에 사실상 가계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은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문제에 직접 관여할 일이 아니라 수의학부의 신설기준인 내용 자체를 재검토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상책이다.

예를 들면 2015년 6월 하순에 내각에서 결정된 ‘일본부흥전략 개정 2015’에서는 국가전략특구의 수의학부 신설 검토로서 “현재의 제안 주체에 의한 기존 수의사 양성이 아닌 구상이 구체화되고, 생명 과학 차원의 수의사가 새로 대응할 구체적 수요가 분명해졌으며, 기존 대학 학부에서는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 최근의 수의사 수요 동향도 고려하여 전국적 견지에서 금년 안에 검토한다”는 취지의 문장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구체적 수요의 기준 등, 논의를 계속하여 수의학부 신설을 희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평하면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신설 기준 방식을 재검토하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국가전략특구의 담당부국에서 실질적으로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그것은 문부과학성의 기득권이 특구의 상당 부분으로 이동할 뿐인 셈이다. 즉, 구체적 수요에 대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정정당한 논의를 펼치고 신설 기준의 재고와 명확화를 문부과학성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내각 인사국 형식에 관한 문제’이다. 이번 가계학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수의학부 신설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문부과학성과, 총리실의 의향을 따르지 않는 부처 간부에 대해 총리실이 내각 인사국의 권한을 이용해서 각 부처가 정권의 의중을 눈치껏 따르도록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었다는 점이다.

내각인사국은 ‘국가 공무원 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법률 제22호)의 내각법 개정예 입각하여 2014년 5월에 내각 관방에 설치된 조직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각 부처의 심의관급 이상의 간부 인사(약 600명)은 관방총리실이 적합성을 심사한 뒤에 내각인사국이 간부 후보 명부를 작성하고, 총리와 관방총리실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장치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종래에는 ‘가스미가세키⁷³ 인사에는 정치를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존재했으나 정권을 맡은 정치가가 각 부처의 간부 인사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총리와 총리실의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부처의 간부 일부가 총리실의 안색을 살피는 에스맨 집단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와 행정의 역할 분담 하에서 관료의 전문성과 업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시점이다.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영국과 뉴질랜드 등 공무원제도에서는 정권을 차지한 정치가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은 없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과장 이하의 상급 공무원⁷⁴ 선출 시 기본적으로 외부 공모를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차관 등 상위 200명은 각 분야의 전문 선정위원회(채용성청 차관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가 검토한다.

호주에서도 상급 관리직(차관을 제외한 심의관 이상)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의무화하고 있고, 제3자 위원회가 심사한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전문 선정위원회가 차관 공모 심사를 하여 내각에 추천하는 형식이다. 만약 내각이 추천자를 거부하면 재공모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거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절차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여소야대 상황의 국정 파행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총리와 총리실 중심의 권력집중화라는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고 옳았으나, 권력을 어떻게 제어하는가라는 거버넌스 방식도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주권의 이념에 부합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얻어서 민주주의적인 판단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시점을 포함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도 참고하여 공문서 관리와 정치주도·간부인사 방식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냉정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⁷³ 霞が関, 일본 도쿄의 중앙관청가를 일컫는 말

⁷⁴ Senior Civil Service

국제전략센터는 연대와 변화를 통해 대안사회를 지향하며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센터의 자문위원을 비롯해 월간국제동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입니다.

자문위원

남문희(시시안 한반도 전문기자)
신순애(탁틴내일 상담가)
이정철(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충각(노동운동 활동가)
이해영(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선임활동가/대표)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존스캣(Reciprocity)
차미경(기록학 연구가)
허석렬(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해외통신원

로날드 콜린스(활동가, 미국)
래리 로젠버그(환경활동가, 미국)
메르시-리아리나스 앙헬레스(평화여성파트너, 필리핀)
자넷 찰스(평화의 증인, 미국)
까뜨리나 사문(그레인, 인도네시아)

편집장: 심태은

교열팀: 가빈 후양, 릴리안 헉스터

번역팀: 예선희, 지민경, 홍정희

국제팀: 배경진, 이로미, 정성미